

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 
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,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, 노동건강연대, 민주노총, 민주  
발 신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, 언론개혁시민연대,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, 진보네트워크센터,  
참여연대,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, 함께하는시민행동( 담당 민변 서채완 변호사  
02-522-7284, 참여연대 이지은 02-723-0666)  
제 목 [보도자료] 시민단체,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 
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 
날 짜 2017. 11. 9. (총 2 쪽)

## 보 도 자 료

**시민단체,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 
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**  
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(목) 오후1시, 서울중앙지검 정문

---

### 1. 취지와 목적

-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정보화진흥원, 금융보안원,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<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>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.
-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, (구)미래창조과학부,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<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>에 따른 것으로,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.
-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.
-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

동의,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.

-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

## 2.개요

- 제목 : <고객 몰래 정보 제공,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>기자회견
- 일시와 장소 : 2017년 11월 9일(목)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
- 주최 :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,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, 노동건강연대, 민주노총,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, 언론개혁시민연대,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, 진보네트워크센터, 참여연대,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, 함께하는시민행동
- 기자회견 순서
  - 사회 : 양홍석 변호사,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
  - 고발취지 :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
  -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
  - 기자회견문 낭독
  - 질의 응답
- 고발장 제출

**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,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,  
노동건강연대, 민주노총,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,  
언론개혁시민연대,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, 진보네트워크센터,  
참여연대,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, 함께하는시민행동**